

# 감출 게 많나... 전남 지자체 '생색내기' 정보공개

### 내용 빼고 걸표지만 공개하고 부분공개 꼼수로 공개율 높여 국민 알권리 확대·정부 투명성 제고 취지 무색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소극적·행정편의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쏙 빼고 걸표지만 공개하는 '생색내기'를 하는가 하면, 비공개와 다른 없는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부분공개' 형태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선 7기 들어 원문정보 공개율도 낮아졌고 공개정보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이용자 혼선을 부추기는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출 게 많나? 낮아진 원문정보 공개율=전남도를 비롯, 22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행정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공개율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중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한 1만5650건의 행정정보 중 8667건을 공개, 55.4%의 공개율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2017년 7월~2018년 4월) 생산된 1만8120건의 원문정보 중 1만2478건이 공개, 68.9%의 공개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활성화되기는 커녕,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지난 1년 간 전남도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0.1%(2018년 12월)~60.0%(2018년 10월) 수준에 머물렀다. 1년 전 같은 기간 공개율이 55.1%(2017년 12월)~74.0%(2017년 8월)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초라

하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된 문건 중 비공개 처리한 원문정보(3081건)는 1년 전(3374건)보다 적었지만 부분공개(3902건)한 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2268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생색내기' 공개='공개' 자료라며 올려놓았지만 정작 내용을 빼고 걸표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은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등으로 나뉘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 2월 '정남진 리포트 및 오토캠핑장 군(郡) 직영 운영계획(안)'이라는 자료를 '공개' 자료라며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지만 내용이 없는 걸 표

지만 올렸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데도 '공개'했다고 생색을 낸 것이다.

목포시도 지난해 24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형태로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십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보고' 자료를 올려놓고도 걸 표지만 올리고 내용은 쏙 빼었다.

무안군은 지난해 22일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무안군 제1차 당정협의회 실시계획' 자료를 '공개' 자료라고 제공하면서 알맹이가 없는 담당자와 부군수·군수 서명이 포함된 걸 표지만 올렸다.

영암군이 지난해 23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농민수당 도입관련 추진상황'도 걸 표지 외에 어떤 내용물도 첨부되지 않았다. '비공개' 자료와 '부분공개' 자료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13일 생산한 '민선7기 도지사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자료'는 걸 표지

만 공개되고 나머지 첨부 파일은 비공개로 분류됐지만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비공개'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분공개도 '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중인 것을 고려하면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와 생색내기식 정보공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는 "공개 자료로 올려놓고도 내용이 없다면 잘못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또 일부 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시스템 이용 상황을 감안, "올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처음으로 '원문정보의 충실성' 항목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영상회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정철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점검을 위한 도-시군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초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규정 무시 성과급 수천만원 '평평'

### 배우자에 건강검진비 주고 전용차 있는 원장 출장비 받아가

광주시출연기관인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지난 2년간 성과급 3400여만원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방안경영 지적에 따라 직원에게만 주도록 한 건강검진비를 배우자에게도 주고, 과거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전용차가 배정된 원장에게 관내 출장비를 수십 차례나 지급한 것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

회는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 시정 조치 등 행정조치 10건을 내리고 4286만 원을 회수·추징·지급 조치했다. 직원 8명에게는 견책 또는 주의조치를, 진흥원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감사결과 진흥원은 광주시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총액을 정한 후 그 범위에서 직원 성과급을 주도록 한 규정을 지난 2년간 무시했다. 경영평가 B등급을 맞은 2017년도에는 성과급 총액 한

도가 1491만원인데 8명에게 3928만원을 줬고, A등급을 얻은 2018년도에는 3626만원을 넘어서 안 되는데 10명에게 총 3652만원을 지급했다. 평가 대상년도에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 등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5명에게 2년간 성과급 736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에게만 주도록 한 건강검진비를 가족에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직원 2명의 배우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줬던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 2014년 지방공기업 방안경영 역제를 위해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

는 지침이 행안부와 광주시에 의해 내려졌고, 지방병원에서 검진자 명단을 통보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업비 8000만원짜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업체명을 사전 노출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업체명이 기재된 배점표를 나눠줬던 것이다.

원장에게 2016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166만원의 관내여비를 줬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고용경제진흥원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됐다. 3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수냐 순천이냐"

###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 오늘 발표

'특정지역 선정을 위한 둘러리 공모'라는 잡음이 일었던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가 11일 발표된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선정 공모에 참여한 여수시와 순천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애초 '특정 지역에 치우친 평가 기준'이라며 반발, '보이콧'을 결성했던 여수시는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의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방침을 바뀐 공모에 참여했다.

여수시는 울촌면 동양아파트 인근 사유지를 건립 예정 부지로, 순천시는 신대지구 옛 외국인학교 부지를 통합청사 부지로 제시했다. 여수의 경우 기존 동부지역본부의 최근 4년간(2015~2018년) 민원 처리현황을 감안한 후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지역본부가 처리한 인근 7개 시·군 지역 행정민원의

40.1%, 여수·순천·광양의 49.1%가 여수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부지가 모두 사유지인데 따른 매입가격 상승 부담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순천시가 후보지로 내세운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의 경우 이미 매입이 완료됐고 기반 시설이 조성된 점, 기존 동부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광양시는 부지 선정 평가 기준에 이의 제기하면서 끝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1일 평가결과와 입지 선정 심사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했다가 납득할만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6월 적조 방제 선제적 대응

### 연구·예찰 전문가 등 대책위 구성 초동 방제 예찰선 12척 확대

전남도는 10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2019년도 적조대책 위원회를 열어 6월 한 달간 적조 방제 집중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적조대책위원회는 적조 연구, 예찰, 방제 전문가와 양식어업인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적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홍보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적조 상황을 평가하고, 적조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 예찰 및 효율적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적조 대응 초동방제

로 피해 없는 해를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유해성 적조 발생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고,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피해 저감 대책이 미비하고, 표준양식기준 준수와 양식장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을 적조 방제를 위한 집중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초동방제를 위해 예찰선을 6척에서 12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SNS 등을 통해 예찰 결과 공유, 적조 상황 전파, 수온 정보 및 위기상황별 양식어업인 관리 요령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 대응 사업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해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한빛원전에 정보제공 핫라인 가동 요구

### 광주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도

광주시의회가 영광군 한빛원전을 찾아 광주지역을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정보제공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한빛원전을 방문이 같이 전달했다.

현재 광주지역은 방사능방재계획상

원전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어 한빛원전의 변화와 관련, 광주시에 휴대전화 문자로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김용집(민중·남구1) 의원은 "광주시가 한빛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비상대책 수립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